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 추진상황

김 남 진

(제주특별자치도 평화대외협력과장)

※ 각 발표문 내용에 덧붙여 제주특별자치도의 남북교류 추진 상황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자 함

1. 현 상황

- 유엔 대북제제의 틀 하에서 정부 주도의 남북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음
- 지자체와 민간 분야로 교류 확대에 체계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시기
- 통일부의 지자체 역할 강조 : 통일부 차관 주재 지자체 남북교류협력협의체 신설('17.8.), 남북협력 전담 조직 설치 권고('18.3.)
- 제주특별자치도는 각 분야별 TF팀 운영 등을 통해 사업계획 구체화 등 준비,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활용 예산 편성 추진 중, (사)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 본부, 제주연구원 등 많은 협력 필요

2. 5+1 남북협력사업 외 민선 7기 공약사항

- ① 양식분야 : 양식기술 이전 및 수산물 가공·유통시설 현대화 지원 및 교류 협력
- ② 축산분야 :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된 씨돼지를 북측 평양돼지공장에 제공
- ③ 다양한 분야의 인적 교류

- 한라산과 백두산의 비교 연구, 대학교간 전반적인 교류 활성화로 점진적 확대
- 2020 제주코리아오픈 국제계태권도대회 개최 시 북한팀 초청 등

3. 고성준 교수님 발표내용과 관련

 추진체계 정비 등 다양한 제안 내용에 깊이 공감함. 특히 남북교류협력 위원회와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은 이미 검토 중에 있으며, 다른 내용에 대해서도 내년도 계획 수립 시 참고하여 반영해 나가겠음

4. 김의근 교수님 발표내용과 관련

- 남북한 교차관광에 대해 제주의 이익이 무엇인지 부정적 시각을 해소시켜
 줄 수 있는 방안이라고 봄. 남북교류는 제주와 북한의 지역이 윈윈할 수
 있는 정책이어야 도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음.
- 크루즈 관광과 관련해서도 북한에 대형크루즈 접안 시설도 없을 텐데 크루즈 관광이란게 가능한가? 하는 의견도 있는데 현재 북한의 여건에 맞춘실질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김의근 교수님 발표 내용처럼 중국, 일본과 노선 연계 등 현실성 있는 계획 구체화 필요
- 5. 도에서는 민관협력을 통해 남북교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. 대북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민간단체들의 많은 참여와 정책 싱크탱크로서 제주연구원의 주도적 역할 기대

'최근 남북관계 변화와 제주도의 남북교류 협력방안'

김 영 수 (서강대학교 교수)

Ⅰ. 최근 남북관계를 보는 기준

- 남북관계의 질적 변화 단계를 설정한 후 이에 맞는 교류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접근 필요
 - 남북관계의 변화 양상을 ① 적대적 대결 ② 적대적 공존 ③ 비적대적 공존 ④ 비적대적 협력으로 설정할 경우, 현재는 '적대적 공존'단계에 '비적대적 공존'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단계
 - 남북교류협력 방안도 남북관계의 단계에 맞게 추진하는 전략적 접근 필요
- 지금은 '비적대적 협력'상황을 가정한 교류협력 방안보다는 '비적대적 공존'에 맞는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성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
- 〈한반도 신경제구상〉도 남북관계의 질적 변화 단계를 감안하여 실행추진 전략과 지침을 마련하는 보강 및 구체화 작업 필요

Ⅱ. 제주도의 남북교류협력 방안

- '북한이 필요로 하는 제주'에 비중을 두는 제안에 동의
 - 제주와 북한과의 상호 교류협력 노력과 함께 북한이 필요로 하는 제주의 위상과 역할을 만들어가는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한 상황

- '제주 속의 북한 만들기'를 구체화하는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도 차원의 행정적 접근 필요
 - '북한이 필요로 하는 특화된 연수', '체육교류를 위한 전지 훈련', '관광, 축산 경험공유 워크숍'등을 수시로 열 수 있는 지정된 공간과 행정적 지원을 준비하여 제주의 경쟁력을 북한과의 교류협력 기반으로 삼는 새로운 노력 필요

Ⅲ. 북한의 지자체 교류협력에 대한 태도

- 현재 북한의 지자체 교류협력에 대한 태도는 "너무 앞서 나가지 마라"로 요약
 -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신중하게 전개하려는 태도 견지
 - 인도적 지원보다는 개발지원 및 협력에 비중을 두는 입장
 - 북한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우선 지원하는 것에 관심
- 정부 간 교류협력이 지자체 접촉보다 우선
- 향후 NGO교류는 실익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

IV. 크루즈 관광의 가능성

- 크루즈 관광은 남북관계가 '비적대적 협력'의 단계에 이르러야 가능한 아이템
- 북한의 SOC현황 및 관광 가능 잠재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판단한 후 이에 맞는 관광 차원의 교류협력 방안을 실행해야 함
 - 현재 북한 상황으로는 크루즈 관광의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없다는 점을고려해야 함
 - 하만 접안 및 관광객 수송 능력, 도로 및 휴게소, 숙박 수용 능력 등을 감안해야 함
- 지금은 크루즈 관광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북한 실태 파악에 비중을 두어야 함

남북교류 협력방안 정책토론회 토론문

신 동 일 (제주연구원 연구위원)

□ 제주-북한간 관광교류(김의근 교수) 관련 토론요지

- 상하이-제주-남포 또는 칭따오-남포-제주를 연결하는 환서해권 크루즈와 제주-나진·선봉-니가타를 연결하는 환동해권 크루즈노선 개발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.
- 충분히 가능한 아이디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환서해권보다는 환동해권 크루즈 노선이 보다 현실적이고 상징적 의미가 크다.
- 첫째, 북한의 서해안 권역은 개성, 평양, 묘향산, 신의주까지 북한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상당 부분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. 최근 원산·갈마지구에 대규모 리조트를 개발하는 이유도 북한의 입장에서는 균형발전의 명분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.
- 둘째, 환동해권 크루즈노선은 중국, 한국(제주), 일본, 러시아까지 연결하는 동북아 평화크루즈노선으로서의 상징적 의미가 커서 중국은 물론 일본과 러 시아를 끌어들일 수 있는 정치적 명분도 가능하다.
- 셋째, 환서해권 노선은 북한의 핵심 도시인 평양과 개성에 가까워서 외부에 드러내는 정도에 한계를 느낄 것이다. 반면 동해안 노선은 북한의 실상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연출된 관광지 이미지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. 과거 금강산관광을 허용한 것도 금강산의 관광매력뿐만 아니라 이러한 전략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인다.
- 다만 환동해권 노선에서 제주는 부산과의 역할 분담 또는 기능 분담이 아주

중요하다.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특정 지역을 배제하면서 환동해권 노선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.

□ 남북경협 재개방안(임을출 교수) 관련 토론요지

- 통일부의 5대 국정과제 가운데는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,
 즉 교류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자체와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활동 공간을 확보하고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다.
- 이 부분에서 과거 12년간의 감귤보내기운동, 북한주민이 제주를 방문하고 4차례에 걸쳐 800여 명의 제주도민이 북한을 방문하는 등 지자체 차원에서 다양한 교류를 경험한 제주의 입장에서 상당한 명분이 있다.
-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자가 제시하는 3대 벨트, 환서해 물류산업벨트, 환 동해 에너지자원벨트, 접경지역 평화벨트는 대한민국 내륙을 중심으로 하여 제주도는 제외되는 것처럼 보여서 조금 아쉽다.
- 토론자 개인적으로는 환동해에너지자원 벨트의 경우에는 제주의 카본프리아 일랜드 2030정책, 풍력을 중심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같은 에너지 정책을 북한의 동부지역과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가능하 다는 의견이다.

□ 남북교류협력 성과와 과제(고성준 교수) 관련 토론요지

- 발표자께서는 향후 감귤지원사업 등 소규모로 추진하는 등 물적 교류에 대해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시는데 전적으로 동감한다. 과거의 북한 과 달리 지금의 북한은 시혜성 지원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다.
- 또한 김정은 시대의 북한의 변화에 대한 전략적 판단과 중장기적 시각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동감한다. 남북관계는 롤러코스터와 같아서하루아침에 극과 극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은 우리 모두가 경험으로 인지하는 것이다.
- 하지만 제주의 입장에서는 지자체 차원에서의 다양한 교류 노하우, 평화의 섬 제주 이미지, 김정은과의 사적 연계성 등 상당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에 이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의 문제라고 본다.

남북교류 협력방안 정책토론회 토론문

강 원 명

(제주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장)

□ 축산분야에서 추진가능한 경협 모델

- O 제주산 돼지 및 액비 교류
 - 제주에서는 씨돼지를 북측에 제공하고
 - 북측에서는 남북(북남)관계 경색으로 중단된「남북흑돼지 사육협력사업 준 공식」과 제주지역 돼지농장에서 발생된 액비(분뇨)를 북측의 농경지에 살 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
- O 사전 조치 및 협의가 필요한 사항

【평양돼지농장의 갖추어져야 할 시설 여건】

- 임신, 분만, 새끼돼지 육성 등 사육 단계별 수용할 수 있는 돈사 구조
- 사료 급이통, 급수시설, 환기시설 설치
-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한 소독시설
- 동절기 실내 보온을 위한 난방장치

【제주측 관계자 현장 점검 및 확인을 위한 출입 허용】

- 씨돼지 이송 전 위 시설여건이 갖추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함에 따라 제주측관계 공무원 및 양돈전문가의 출입 허용
- 씨돼지가 북측으로 이송되는 모든 과정에 제주측 관계자의 입회 및 확인 필요

【수입동물 검역조건 완화】

- 제주는 남한에서 유일하게 구제역 비발생 지역이며,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유일한 지역임.
- 따라서, 북측의 수입동물 검역조건을 최소화할 경우 검역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어 돼지 이송시기가 빨라질 수 있음.

O 현행 남측의 수출동물 검역 절차

- 1. 검역시행장 지정 신청서 제출, 수출 전에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제출
- 2. 농림축산검역본부 계류장 또는 수출하고자 하는 지정받은 검역시행장에 수출 동물 입고
- 3. 상대국에서 요구하는 사항 또는 위생조건에 대한 검사
- 4.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
 - · 임상검사는 가축질병병성감정실시요령에 준하여 개체별로 검사 실시
 - · 정밀검사는 동물별 전염병검사방법에 의거 실시 미생물학적검사, 병리학적 검사, 혈청학적검사
- 5. 검역 후 이상이 없는 것에 한해 선박 및 항공 적재, 운송
 - 검역대상 질병 : 구제역, 돼지열병, 돼지일본뇌염, 돼지열병 등

【돼지 운송 및 입식】

- 씨돼지 운송은 가급적 육상 운송을 선호
- 남북 출입신고 등 제반절차 이행될 경우 씨돼지 상차 후 1일 이내에 평양 돼지농장까지 운송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
- 장기간 운송에 따른 씨돼지 스트레스 감소로 임신율 향상
- 해상운송시 타 교류품목과 함께 이동하여야 함에 따라 운송기간 과다 소요 될 우려가 있음.

【제주지역 돼지농장에서 발생된 액비(분뇨) 인수 여건 조성】

- 액비(분뇨)는 현실적으로 육상운송이 불가함에 따라 해상운송 해야 함
- 북측 항구에 1만톤 내외 규모의 액비저장조 시설 설치 필요

남북 흑돼지 사육협력사업 추진계획

- '07. 11 제4차 제주도민 평양방문시 남북 흑돼지 사육협력 추진키로 협의
- '08. 11 북측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양돼지공장 개보수사업 7개동
 중 3개동에 대하여 내부기자재 및 제주 흑돼지(100두) 공급
 지원키로 합의 ⇒ 750백만원 소요 예상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'08. 9 ~ '09. 7
- 사업장 위치 : 평양시 사동구역 덕동리
 - 타시도 지방자치단체도 지원(경기도, 전라남도)
- 지원규모 : 양돈장 3개동 내부기자재 및 흑돼지 공급
- 소요예상액 : 750백만원(지방비 470, 협력기금 200, 현물 80)
 - (1단계) '08. 9~'09. 3 ⇒ 양돈장 1동 내부기자재 기공급(220백만원,지방비)
 - (2단계) '09. 4~'09. 7 ⇒ 양돈장 2동(지방비 1, 남북협력기금 1) 및 흑돼지 (100두) 공급
 - ※ 지방비 250백만원, 협력기금 200백만원, 흑돼지(80백만원, 농가 기부)
- 주 관 : (사)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(협조 : 통일부, 제주특별자치도)
 - ❖ 북 한 : 민족화해협의회(회장 김영대)

□ 그동안 추진상황

- '08. 9. 23 ~ 11. 11 : 남북 흑돼지 사육협력 1~3차 방북(개성공단, 평양)
 - 사업예정지 방문, 지원규모 협의, 합의서 작성 등
- '09. 1. 16 : 양돈장 1동 내부기자재 공급(감귤+당근)
- '09. 3. 5 : 남북협력기금 신청(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⇒통일부)
- '09. 4. 1~5 : 남북 흑돼지 사육협력 4차 방북
 - 양돈장 1동 내부기자재 설치상황 점검 및 향후 추진방안 협의

□ 향후 추진계획

- 북측에서 내부기자재 설치 완료 후 우리도 관계관 현지 점검을 통하여 2단 계 사업추진
- 남북관계가 회복되면 제5차 제주도민 평양방문을 통하여 "제주흑돼지농장" 준공식 개최

시설예정지 전경





에너지 분야

김 세 호

(제주대학교 교수)

- ▶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과 핵 문제 해결 가능성 등에 따라 전력 등 에너지, 도로·철도·항만 등 기반시설 개발 등을 위한 지원 확대 예상
- ▶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것 : 전기
- 남한과 북한의 전력설비 격차 : 14배
- 2016년 발전설비 총 용량 : 북한 7,661MW, 남한 10만 5,866MW
- 풍력 발전이 가능한 북한 지역의 발전 가능 용량이 43.6GW로 남한의 25.5GW와 비교해 약 1.7배 높고, 북한 전체 면적의 18% 수준이 풍속 초당 4.5m/s 이상인 지역
- 서해안 지역은 풍속 8~10m/s의 남서풍이 안정적으로 불어 대규모 풍력
 발전이 가능하다는 평가
- 개마고원 지역의 높은 풍력밀도가 육상풍력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예상
- 현재 북한은 북한과학원이 100kW 풍력발전기를 자체개발에 성공한 정도의 수준
- 유니슨이 4.2MW, 두산중공업 5.5MW, 8MW(개발 시작)
- 북한은 2044년까지 5GW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투자해 전체 발전량의 15%를 풍력으로 확보한다는 전력 수급정책을 발표
- ⇒ 신재생에너지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

- ▶ 최근 남북한 관련 에너지 분야 세미나 활성화
- 7월 10일 환경재단과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,
 - '신 남북시대, 지속가능한 에너지·환경 협력방안 세미나'
- 7월 4일 한국전력
 - '2018년도 전력스쿨 및 제3차 전력경제포럼'
- 6월 21일 조선비즈
 - '2018 미래 에너지포럼'
- ▶ 세미나 주된 주제 : 동북아 수퍼그리드
- 한국, 중국, 일본, 러시아, 몽골 등 동북아 국가의 전력망을 잇는 초대형프로젝트
- 남북한과 동북아 전력협력사업을 병행해 동북아 에너지 허브국가로 도약이
 가능
- 전기가 남는 국가와 부족한 국가가 전력을 주고받아 안정적인 전력수급체계를 구축하는 사업
- 러시아의 천연가스, 몽골의 태양광 전력을 수출 상품처럼 이웃 나라에 파는 것으로 최근에는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공동으로 개발해 활용하고 에너지 부문 에서 협력하는 사업으로 확대
- 유럽과 북미 등 전 세계 80여개국은 이미 250GW 이상의 전력을 연계
- 동북아 지역은 지형과 정치적 상황으로 국가 간 전력망 연결이 안된 상태
- 현재까지 한·중은 전력망 연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
- 한·러는 전력망 연결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공동연구를 계획 중
- ⇒ 동북아 HVDC 연계망 구축과 전력시장 운영이 핵심이며, HVDC 송변환 기술의 자립 필요
- ▶ 정부 신재생 3020이행계획
- '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%까지 확대'
- ▶ 제주도 CFI 2030
- '2030년까지 연간 제주도 전력수요량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으로 공급'

- ◆ 대규모 투자 및 기간이 소요되는 동북아 수퍼그리드에 앞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
- ◆ 남북한 에너지 협력과 제주도 정책 및 관련 기술의 연계
- ▶ HVDC(연계선) 운영 능력 활용
 - 현재 제주도에는 2개의 연계선이 운용되고 있고 2020년 3연계선 구축 예정
- ▶ 에너지 자립마을 운영기술 확보
- 마을 풍력 및 태양광, 에너지저장장치 등을 결합한 자립마을 구축 및 운용 기술
- ▶ 신재생에너지 및 HVDC 관련 교육센터 및 인력양성 체계 구축
- 도내 대학 및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및 HVDC 관련 기술자 교육과 양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
- ▶ 제주도의 모델을 개발하여 보급
-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저장장치를 결합한 자립형 개발
- 이익공유화 기금을 활용한 경제성 및 기술력 확보 모델 구축